

결국엔 ‘콘텐츠’ … 다양한 관심사 충족시키겠다

창간 63주년 기념 이용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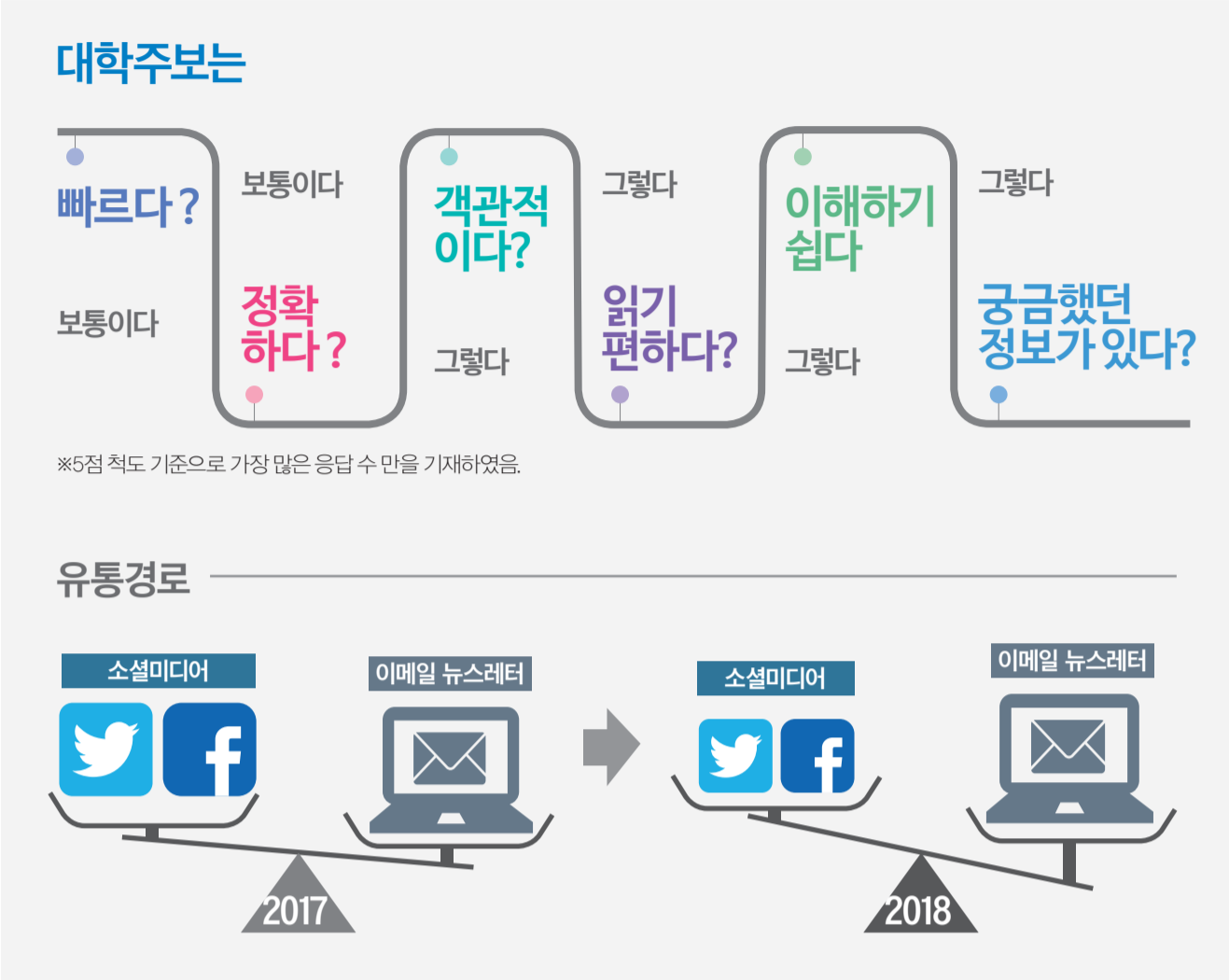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우리신문이 창간 63주년을 맞이해 연례 구성원 미디어 이용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자들은 보다 ‘다가오는 미디어’를 원함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이후 대학주보는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퍼스트’로 전환을 꾀했다. 2015년부터는 지면 격주 발간으로 전환하며 온라인 유통 체계에 더 힘을 쏟는 등 혁신을 시도했다. 독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신문이 택한 혁신의 길이 맞는 방향인지 짚어보고, 보완점을 알아보기 위해 연례 구성원 미디어 이용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 설문 결과, 총 107명이 응답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에 이어 최근 2년간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미디어 유입경로가 이메일 뉴스레터로 공고해졌다는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학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 86명 중 52명이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주보 이용자 역시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학주보를 알고 있는 100명 중 47명이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뉴스 소비의 주류로 부상한 이후 한때 주목받았던 것이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다. 기존 미디어가 지향했던 ‘다수’와 ‘대량’이 아닌, 타겟팅된 수용자의 선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관심 뉴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뉴스를 전달하기도 한다. 비록 선호 정보만 사용자에게 도달해 이외 정보로부터 고립되는 ‘필터버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버즈피드, 피키캐스트 등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주로 성장한 미디어도 존재한다.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역시 뉴스 큐레이션의 연장선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용자



“

뉴스 큐레이터 시대, 독자 맞춤형 기사 전달을 위해 노력 할 것

”

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우리신문 뿐 만 아니라 본부도 최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제공하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살펴보면 우리학교 관련 뉴스, 교육계 뉴스, 일반 이슈 중 우리학교가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한 뉴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체육대학 체육부가 소속 팀 경기 소식을 모아 전달하기도 한다. 이용자는 선호에 따른 기사를 선택해 볼 수 있다. 반면 우리신문 이메일 뉴스레터는 우리신문이 최근 발행한 온라인 뉴스 중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사 하나씩을 실어 주당 약 3번 발송한다. 사용자 맞춤형 뉴스 또는 선호 정

보 제공이라는 뉴스 큐레이션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으나 독자에게 꾸준히 우리학교와 관련된 뉴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노력 중의 하나이다.

사실 이는 떨어지는 대학주보 홈페이지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대학주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할 정도의 열독자는 비율은 매우 낮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주보는 2013년 학보사 최초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후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채널을 확장하기도 했지만, 홈페이지로의 큰 유입요인은 되지 않았다. 지난해 초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에브리타임 게시판 운영 등 SNS 채널을 추가

했지만 성과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현재 대학주보의 메인 SNS 채널인 페이스북 역시 국내 사용자 감소세와 개인정보 유출 악재가 겹쳐 초창기만큼의 반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뉴스레터 콘텐츠뿐만 아니라 개봉률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뉴스레터 개봉률은 메일 당 통상 20% 내외다. 개봉이 직접적인 링크 클릭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뉴스레터는 독자에게 대학주보로의 접근을 도울 뿐, 직접적으로 독자를 끌어들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는 돌고 돌아 결국 ‘콘텐츠’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을 독자가 제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독자들이 대학주보를 찾아올 수 있을만한 매력적인 콘텐츠 또한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종혁(언론정보학) 교수는 “대학주보는 특성상 SNS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상적인 정보교환이 아닌 대학이슈나 정책과 같은 핵심이슈에 대한 공론장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서는 의제 설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들, 구성원도 헷갈리는 정보들, 토론이 필요한 정보들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정책·제도 ▲교육 ▲학술·연구 ▲경영·행정 ▲학생·학생회 ▲취업 순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우리신문은 ▲학생·학생회 ▲정책·제도 ▲경영·행정 ▲교육 순으로 많은 기사를 내보냈다. 다양한 주제로 다가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올해 설문에 추가한 독자의 대학주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질문에는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독자에게 더 다가가는, 독자를 더욱 끌어들이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것임을 다짐한다.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의 꾸준한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리며 대학주보에 보내준 신뢰를 배신하지 않도록 진력할 것이다.

표절의 늪에 빠진 인터넷신문, 학보사 기사까지 도용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한 인터넷신문이 학보사 기사를 무단 도용한 일이 드러나면서 인터넷신문에 만연한 표절 실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는 우리신문 기사(오늘도 불법 위에 잡드는 세입자들, 아무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대학주보 제1628호 4.5면, 2017.12.04)를 포함해 모두 10개 학보사, 50여 개의 기사가 무단 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용을 자행한 인터넷매체는 N신문으로 무단 전제, 일부 편집을 통한 표절 등 학보사 기사를 도용했다. 서언회는 향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N신문에게 표절기사 삭제와 재발방지 공개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강대 서강학보 장채원 편집장은 “학생 기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든 결실을 무단 도용한 점은 언론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사명감에도 반하는 일”며 “이런 일은 한국사회가 지닌 저작권 인식 부재를 단적으로 시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 N신문은 사과문을 통해 도용을 인정하고 해당기사 삭제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도용을 한 자사기자에게 경고조치를 비롯해 일정기간 기사송고 금지와 제명 등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N신문 발행인 김 씨는 “학보사 기사가



일반대중에 보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기사를 가져다 쓰게 됐다”며 “스스로 편집자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신문 수익구조가 한정돼 있는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언회는 N신문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언회 이민준(고려대) 회장은 “N신문 측 사과는 현 상황을 면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도용한 기사를 전부 삭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에도 N신문은 지난해 서울대 <대학신문> 기사 상당수를 무단 도용했다가 대학신문 측 항의로 해당 기사를 삭제한 전력이 있다. 4달여 만에 다시 벌어진 학보사 기사 표절사태에서, N신문이 기사전

문을 제목만 바꾼 채 자사 기사인양 기재한 일도 확인돼 저작권 침해와 언론윤리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보사 기사까지 무단 도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언론윤리의식 부재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이 표절문제에 둔감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인신위)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2017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신문이 가장 많이 어긴 심의조항은 ‘표절금지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금지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1,480건으로 전체 위반 3,360건의 43.8%에 달한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신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표절금지 위반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2015년 901건이었던 표절금지 위반은 2016년 1,107건, 2017년 총 1,47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위반 사항 중 표절금지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 3년간 각각 28.0%, 34.3%, 43.8%로 증가했다.

이수중(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표절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책임에 대한 신념과 공감의 열마나 인터넷신문에 부족함을 보여 준다”며 “표절이 근절되지 않으면 언론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신문들이 이를 자각하고 저널리즘적 사명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표절문제에 대한 연구기회 제공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강화해야한다”며 “해당교육을 통해 매체 스스로가 언론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